



가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정성춘 (jung@kiep.go.kr, Tel: 3460-1202)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이형근 (hkleee@kiep.go.kr, Tel: 3460-1069)

1. 서론
2.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3. 평가와 시사점



- ▶ 지난 6월 18일 일본정부는 앞으로 10년 후인 2020년까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신성장전략」을 발표
 - 2009년 9월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일본경제에 대한 비전이 결여됐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지난 12월 말 「신성장전략 기본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종합적인 전략을 제시함.
- ▶ 「신성장전략」은 7대 전략 분야와 우선 추진과제로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
 - 7대 전략분야로는 ① 환경·에너지대국, ② 건강대국, ③ 아시아경제, ④ 관광·지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 ⑥ 고용·인재, ⑦ 금융이 있음.
 - 이 「신성장전략」의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GDP 성장률을 연평균 명목 3%, 실질 2%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도 제시됨.
- ▶ 「신성장전략」은 환경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일본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경제성장에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신성장전략」은 내수뿐만 아니라 아시아경제의 활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아울러 「관민일체」의 협력체제를 강조함으로써 강력한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음.
- ▶ 그러나 일본 내에서 「신성장전략」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도 대두되고 있어, 이 전략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정책역량과 추진체제의 확보가 향후 가장 큰 과제
 - 아울러 개별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 일본정부의 「신성장전략」 추진은 우리나라와의 경쟁심화를 예고하므로 이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
 - 특히 인프라 수출 확대, 관광·금융·의료 허브기능 회복, 환경·에너지 대국 지향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신성장전략」의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관민일체형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

1.

■ 일본정부는 2010년 6월 18일 향후 일본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신성장전략」을 각료회의에서 채택하였음.

- 일본정부는 2009년 12월 「신성장전략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7개의 전략 분야에서 300개가 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신성장전략」은 이들 정책들 중에서 국가 전략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는 21개의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이의 중점적 추진을 제시하였음.

■ 「신성장전략」이 발표된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주당 경제정책에는 성장전략이 없다는 국민적 비판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임.
- 하토야마 전 총리의 경제정책은 주로 내수확대, 가처분 소득증대, 소득분배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은 없다는 비판이 많았음.
- 둘째, 7월 참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민주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에 민주당의 성장전략을 종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선거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음.

■ 이하에서는 「신성장전략」의 주요내용, 의의, 과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음.

2. 「신성장전략」

가.

■ 「신성장전략」은 정책이념으로서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과거의 정책방향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음.

- 제1의 길은 「공공사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1970년대까지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방식은 80년대 이후 사회자본의 정비가 완료되면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고 있음.

- 제2의 길은 「시장원리주의적 성장방식」으로 공급측면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성장방식임.

- 그러나 이 성장방식은 공급측면의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양극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음.

- 제3의 길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이 수요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성장방식」으로 앞의 두 가지 방식과 차별화됨.

- 제3의 길에서는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중시하면서 낭비적 공공사업에 반대하고 있어 제1의 길과 차별화되며,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제2의 길과도 차별화됨.

■ 향후 수요확대가 유망한 분야로서 환경과 복지 분야를 제시하였음.

-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에서도 환경문제가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임.

-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수요확대가 기대되며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임.

- 해외에서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인프라 정비 수요, 관광, 농식품 등의 수요가 기대되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임.

■ 이러한 기본적 관점 하에서 「신성장전략」은 7개의 전략분야, 21개의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제시하였고 이를 실시하여 2020년까지 달성할 거시경제적 수치를 제시하였음.

- 7대 전략 분야는 ① 환경·에너지, ② 건강(의료, 간병), ③ 아시아 경제의 활력 활용, ④ 관광입국·지역활성화, ⑤ 과학·기술, ⑥ 고용·인재, ⑦ 금융 분야임.

- 7대 전략분야에서 국가전략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는 21개의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제시하였음.
-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는 법인실효세를 인하,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 의료체재비자의 도입, 관민제휴에 의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프라 수출확대, 휴가취득 분산화로 관광 활성화, 종합거래소 창설 등을 들 수 있음.

표 1.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2대 부문	7대 전략 분야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성장 부분	그린 이노베이션 (환경·에너지대국)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확대
		환경미래도시 구상
		삼림·임업 재생 플랜
	라이프 이노베이션 (건강대국)	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제도
		외국인 환자 유치
	아시아 경제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 수출
		법인세를 인하 및 아시아 거점화 추진
		글로벌 인재육성 및 고도인재 수용 확대
		지식재산 표준화 전략과 쿨 재팬의 해외전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구축
관광·지역	종합특구제도 창설	
	방일외국인 3,000만 명 프로그램 및 휴가취득 분산화 추진	
	중고주택·관광시장의 배증	
	공공시설의 민간개방 및 민간자금 활용사업 추진	
기반 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	‘리딩대학원’ 구상 등에 의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촉진
		연구개발투자 충실
	고용·인재	유칭원과 보육원의 일체화
		일본판 직업능력평가제도(NVQ) 도입
		새로운 공공 구축
	금융	종합거래소(증권·금융·상품) 창설

- 거시경제목표로서는 2020년까지 명목 경제성장률 3% 이상, 실질 경제성장률 2% 이상, 실업률은 가능한 조기에 3%대로 인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그러나 과거 10년 간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 「신성장전략」은 환경·에너지, 건강, 아시아, 관광 등 4개 분야에서 2020년까지 120조 엔의 신규수요, 500만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하였음.

표 2. 「신성장전략」의 신규수요 및 고용 창출 효과

분야	신규수요	신규고용
환경·에너지	50조 엔	140만 명
건강	50조 엔	284만 명
아시아 수출	12조 엔	19만 명
관광	11조 엔	56만 명

- 이하에서는 7대 전략 분야와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7

1)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에너지대국 전략

■ 2020년까지의 목표

- 50조 엔 이상의 환경 관련 신규시장 창출과 환경 분야에서 140만 명의 신규고용 창출
- 일본의 민간 베이스 기술을 활용한 세계의 온실효과 가스 감축량을 13억 톤(일본 전체의 총배출량에 상당)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

■ 정책방향과 추진 시책

- 새로운 제도 설계와 변경, 새로운 규제·규제완화 등의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를 통해 세계 제일의 환경·에너지 대국화
- 「챌린지 25」 추진: 모든 주요국에 의한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국제협력 틀의 구축과 의욕적인 목표의 합의를 전제로 2020년에 온실효과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
- 환경·에너지 분야의 혁신(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성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원확보 추진
- 전력 부문 고정가격 매입제도 확충 등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풍력·소(小)수력·바이오매스·지열 등)의 보급 확대, 저탄소투융자 촉진, 정보통신기술 활용, 원자력 이용 확대

- 축전지와 차세대 자동차, 화력발전소의 효율화, 정보통신시스템의 저소비 전력화 등 혁신적 기술개발의 조기 실현, 친환경 물류시스템으로의 전환(modal shift) 추진, 에너지절약형 가전제품 보급
- 일본형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효율적인 전력수급 실현, 성장세에 있는 해외 관련 시장에서의 진출 지원
- 리사이클 추진을 통한 국내자원의 순환적인 이용 철저, 희귀 금속·희토류 등을 대체하는 기술개발 추진 등과 함께 종합적인 자원에너지 확보전략 추진
- 쾌적성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의한 라이프스타일 변혁
- 에코주택, 히트펌프 등의 보급 확대, LED와 유기EL 등 차세대 조명의 100% 실현을 통한 주택·사무실 등의 탄소배출 제로화(Zero-Emission) 추진
- 이를 위해 「환경 컨시어지(concierge)제도」¹⁾ 창설
-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보수 촉진 등에 의한 「녹색도시」화
- 중장기적인 환경기준 설정 및 도시 계획·재생·재개발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 노후화된 사무실 등의 재개발·개보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책 강구
- 지방에서부터 경제사회구조를 변혁하는 모델 확립
- 지방의 에코사회 형성 노력을 지원
- 규제개혁, 세계의 그린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를 활용하고, 환경·건강·관광 분야에 투자사업을 집중 실시

2)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대국 전략

■ 2020년까지의 목표

- 의료·간병·건강 관련 서비스의 수요에 걸맞는 산업육성과 고용창출

- 신규시장 약 50조 엔 창출과 신규고용 약 284만 명 창출

■ 정책방향과 추진시책

- 의료·간병·건강 관련 산업을 성장견인 산업으로 육성
- 새로운 민간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규정 변경을 실시
- 혁신적인 의약품, 의료·간병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 산·관·학 협동 대응, 의약벤처 육성 추진
- 신약, 재생의료 등의 첨단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원격의료시스템, 고령자용의 개인 이동수단, 의료·간병 로봇 등의 연구개발·실용화 촉진
- 치료실험 환경의 정비, 승인심사 신속화 추진
- 아시아 등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촉진
- 의약품의 해외 판매와 아시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검진, 치료 등 의료 및 관련 서비스를 관광과 연계해 촉진
- 공동 임상연구·치료실험 거점 등의 분야에서 성장하는 아시아와 협력 추진
- 고령자 친화형(barrier free) 주택²⁾ 공급 촉진
- 고령자 친화형 주택 구입과 개보수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고령자 친화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 미래불안 해소, 즐거운 삶을 위한 의료·간병 서비스의 기반 강화
- 의사 수의 증가,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통한 의료·간병 종사자 확보 및 이들 간의 역할 분담 개선
-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고도·전문 의료의 집약화, 간병시설·거주 서비스 증가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간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 정비

1) 가 가가 가

2) 가 , 가

- 지역의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실현
- 지역주도에 의한 지역의료 재생 도모: 의료·간병·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재택생활 지원장비 정비, 고령자 스스로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구축
- 고령자의 평생학습과 교양·지식을 흡수하기 위한 여행 등 시니어 대상 서비스 수요의 창출과 고령자의 창업·고용·기술승계 등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

3) 아시아경제 전략

■ 2020년까지의 목표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 구축
- 아시아의 성장을 활용하기 위한 국내 개혁 추진, 재화·자본·인적 흐름 배증
- 「아시아의 소득 배증」을 통한 성장 기회 확대

■ 정책방향과 추진 시책

- 지속적인 아시아 시장 창출
- 아시아 지역에서 모든 경제활동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 구축 등을 실시
- 일본이 2010년 APEC 의장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2020년을 목표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을 구축하기 위한 일본의 로드맵 수립
- 일본의 「안전·안심 제도」를 아시아에 전파
- 환경분야와 제품안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술 및 규제·기준·규격을 아시아 각국과 공동으로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
- 스마트 그리드,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등 일본이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분야에서 전략적인 국제표준화 작업을 신속히 추진

- 식품의 경우 유통 다양화와 국제화를 발판으로 아시아 각국과 함께 식품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공헌
- 일본의 「안전·안심 기술」을 아시아 및 세계에 보급
- 환경기술과 관련해 일본이 강점을 가진 인프라 정비를 패키지로 아시아 지역에 전파, 구체적으로 신칸센(新幹線)·도시교통, 물, 에너지 등의 인프라 정비 지원 및 환경공생형 도시개발 지원에 민관이 함께 대응
- 건축사 자격의 상호승인을 추진하여 일본 건설업의 아시아 진출을 지원, 개도국의 산업인재 육성을 민관이 협력해 추진
- 일본의 「안전·안심」 제품 수출을 촉진하고,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관리·운영 노하우를 강화
- 아시아 시장과 하나가 되도록 일본 국내개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일본과 세계와의 사람·재화·자본 흐름 배가
- 하네다의 24시간 국제거점 공항화 및 오픈 스카이 구상 추진, 대형 컨테이너 선박인 포스트 파나맥스(Post Panamax)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을 정비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비즈니스맨 및 제품의 흐름 확대
- 해외 유학생 수용 확대, 전문직종의 외국인이 일하기 쉽도록 국내체제 정비
- 무역 관련 절차 원활화 추진, 해외수익의 본국 환류 용이성 확대
- 금융·운수 등 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 아시아 및 세계 각국과 대학,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촉진
- 「아시아의 소득 배증」을 통한 성장기회의 확대
- 확대된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콘텐츠, 디자인, 패션, 요리, 전통문화 등 일본의 「창조적 산업」을 전파함으로써 일본의 브랜드력이나 외교력 강화와 연계
- 저작권 침해 대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협조

- 도시화, 지구환경, 세계규모의 격차해소 등 전지구적 문제 해결에 적극 공헌

4) 관광입국·지역활성화 전략

가) 관광입국 추진

■ 2020년까지의 목표

- 방일 외국인을 2020년 초까지 2,500만 명 유치, 장래는 3,000만 명으로 확대
- 2,500만 명에 의한 경제과급효과로 약 10조 엔 창출과 신규고용 56만 명 창출

■ 정책방향과 추진 시책

- 관광을 통한 국내의 교류인구의 확대와 일본의 독자적 문화재·전통예능 등의 문화유산 활용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역활성화와 고용기회 확대의 중요한 수단
- 방일 관광비자 취득 간소화,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 유학환경 정비, 홍보강화 등을 도모. 또한 관광입국을 위해 교통접근성 개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조성을 추진
- 휴가 취득의 분산화 등 로컬 홀리데이(local holiday) 제도(가칭) 검토, 매력적인 관광지조성 등을 통한 국내 관광수요 증대 등 종합적인 관광정책 추진

나) 지방도시 및 대도시 재생

■ 2020년까지의 목표

-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능력을 향상
- 대도시권의 공항·항만·도로 등 인프라에 대해 전략적으로 중점 투자

■ 정책방향과 추진 시책

- 향후 지역진흥책은 NPO 등의 '새로운 공공(公共)'과 협력하여 지방의 창조력과 문화력을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

- 특구제도를 활용한 도시 및 지역 재생

- 지역의 성장모델 구축

- 지역주권형 사회의 구축을 도모하는 '녹색분권개혁' 추진 및 지역주민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주권개혁' 단행

- 도시는 도시답고, 농어촌은 농어촌다운 지역진흥책을 추진

- 권역별 생활기능 확보, 정주(定住)자립권 구상 추진, 낙도·인구과소 지역의 자립·활성화 지원,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 성장의 토대인 대도시의 재생을 위해 투자효과가 높은 대도시권의 공항·항만·도로 등의 인프라에 대한 중점투자과 거점 정비를 전략적으로 추진

- 특구제도,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

-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노후 사회자본도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유지·관리를 도모

다) 농수산 분야의 성장산업화

■ 2020년까지의 목표

- 식량 자급률 50%, 목재 자급률 50% 이상 실현
- 2017년까지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액을 현재의 2.2배 수준인 1조 엔으로 확대

■ 정책방향과 추진 시책

- 「지역자원」의 활용과 기술개발에 의한 성장잠재력의 발휘

-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도입, 바이오매스 등 지역자원의 활용, 생산·가공·유통의 일체화를 통한 6차 산업화, 농상공 제휴, 규제 개선 등

- 삼림·임업의 재생

- 도로망 정비, 삼림관리 전문가 등의 인재육성, 간벌제 등 국산재 이용 확대, 목질 바이오매스 활용 등

- 검역협이나 판매루트 개척 등을 통한 수출 확대
- 농수산물·식품 관련 잠재수요가 높은 품목과 지역을 중심으로 검역 협이나 판매루트 개척에 주력
- 폭넓은 관점에서 ‘먹거리’에 대한 미래비전 책정
- ‘먹거리’에 대해 소비자·생산자를 포함해 산관학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검토

라) 스톡을 증시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

■ 2020년까지의 목표

- 중고주택 유통시장·개량시장의 규모 배증
- 내진성이 불충분한 주택 비율을 5%로 감소

■ 정책방향과 추진 시책

- 에너지절약 주택에 대한 투자 활성화
- 1,400조 엔의 개인금융자산 활용, 주택금융·주택세제 확충
- 1,000조 엔의 주택·토지 등 실물자산의 효과적 이용 도모
- 장기우량주택의 건설·유지관리·유통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 주택개량(reform)시장 환경정비,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리버스 모기지³⁾ 확충·활용 촉진 및 지역제품을 이용한 주택·건축물 공급 촉진
- 주택 및 건축물의 내진성 제고를 위한 개량·보수 촉진
- 주택 등의 내진화 철저

5) 과학·기술·정보통신입국 전략

■ 2020년까지의 목표

-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이노베이션과 라이프 이노베이션
- 세계 톱 수준의 대학·연구기관 수의 증가, 이공계 박사과정

3)

수료자의 완전고용 달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촉진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한 국민생활의 편리성 향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생산성을 3배 향상, 생산 코스트 저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
- 정부와 민간 합계 기준의 연구개발투자는 GDP 대비 4% 이상 달성

■ 정책방향과 추진 시책

- 연구환경·이노베이션 창출조건의 정비, 추진체제의 강화
- 대학·공공 연구기관의 개혁 가속화, 신진 연구자를 위한 자립적 연구환경과 다양한 직업경력 경로(career path) 정비, 연구자금·연구지원체제·생활조건 등 매력적인 환경 준비
- 기초연구의 진흥과 우주·해양 등 새로운 분야 개척, 자금지원 및 실험을 용이하게 하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제도·규제개혁과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활용
- 과학·기술정책 추진체제를 철저히 개선하고, 국제 공동연구 및 개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등 과학·기술 외교를 추진
-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국민생활 향상·국제경쟁력 강화
- 개인정보보호, 보안 강화 등의 대책 추진, 정보통신기술 관련 인재육성
- 각종 행정절차의 전자화·원스톱화 추진, 주민표 코드와의 연계를 통한 각종 번호의 정비·이용,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이용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

6) 고용·인재 전략

가) 고용

■ 2020년까지의 목표

- 전체 취업률 제고(20~64세 80%, 15세 이상 57%, 20~34세 77%), 여성취업률 제고(25~44세 여성 73%, 첫째아이 출산 전후 여성의 계속취업률 63%), 고령취업률 제고(60~64세 63%)

- 남성의 육아휴업 취득률 13%, 장애인의 고용 확대(실제 고용률 1.8%, 장애인 취로시설에 대한 발주 확대 8억 엔), 프리티(임시일용직)를 124만 명 수준으로 감소,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감소
- 직업카드 취득자 300만 명, 대학 인턴십 실시율 100%, 대학에의 사회인 입학자 수 9만 명, 직업능력개발학교(專修學校)에의 사회인 선발 총수 15만 명, 자기계발 실시 노동자의 비율 향상(정규직 70%, 비정규직 50%), 공공직업훈련 수강자의 취직률 제고(시설내 80%, 위탁 65%)
- 연차유급휴가 취득 촉진(70%), 노동시간 단축(주간 60시간 이상의 고용자 비율을 50% 감축), 최저임금 인상(전국 최저 800엔, 전국 평균 1,000엔), 노동재해발생 건수 30% 감축, 정신건강(mental health)에 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직장 비율 100% 달성, 간접흡연이 없는 직장 실현

- 지역고용 창출과 ‘품위 있는 일자리’의 실현
 -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한 고용창출 추진 및 NPO나 사회기업가 등 ‘사회적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고용창출’ 추진
 - 고용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균등·균형 대우 추진, 급부형 세액공제 검토, 최저임금 인상,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실현(연차유급휴가 및 육아휴업 취득 촉진, 노동시간 단축 등)

나) 인재

■ 2020년까지의 목표

- 누구나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출생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급격한 인구감소 경향에 대응
- 취학전·취학기의 대기 아동을 신속하게 해소
- 출산·육아 후 희망자 모두의 복직 실현(2017년까지)
- 국제적인 학습 도달도 조사에서 항상 세계 톱 수준 지향

■ 정책방향과 추진 시책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활력을 유지
 - 어린이수당 지급과 고등학교 실질 무상화 실시
 -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체화 추진, 이용자 본위의 보육제도 도입, 각종 제도·규제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 촉진, 방과후 수업 확대
 - 육아휴업의 취득 기간·방법의 탄력화(육아기의 단시간 근무 활용 등), 육아휴업취득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한 풍부한 인재층 형성
 - 초등·중등교육: 교원의 자질 향상, 민간인의 활용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교육지원체계 강화
 - 고등교육: 장학금제도 확충, 대학의 질적 수준 보증과 국제

■ 정책방향과 추진 시책

- ‘고용·인재 전략’의 추진과 ‘새로운 공공(公共)’의 지원
 - 젊은층, 여성, 고령자, 장애인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취업저해 관련 제도·관행 시정, 보육서비스 등 취업환경 정비에 앞으로 2년간 집중
 - 관(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NPO,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공공 재화·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교육, 육아, 마을건설, 간병이나 복지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새로운 공공’을 지원
- 재도약이 가능한 ‘트램펄린형 사회’ 구축
 - ‘제2의 사회안전망’ 정비(구직자 지원제도 창설 등)와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강화
 -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직업능력개발·평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직업카드제도’를 일본판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⁴⁾로 발전

4) NVQ 가 가

화, 대학원 교육의 충실·강화, 학생의 창업력 육성을 포함한 직업교육 추진

- 외국인학생의 적극적 유치, 민간교육서비스의 건전한 발전도모

7) 금융 전략

■ 2020년까지의 목표

- 민관의 총동원을 통한 성장자금 공급
- 기업의 글로벌한 존재감 향상
- 아시아의 주요 시장 및 플레이어로서의 지위 확립
- 국민이 풍요로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금융자산의 운용 확대

■ 정책방향과 추진 시책

- ‘금융시스템의 진화’ 및 ‘신금융입국’ 지향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해외에서의 일본 기업 활동, 국내외 프로젝트 등 투융자와 지원대상의 카테고리·특성에 적합한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구축
 - 금융 시장과 거래소의 정비 및 금융부제 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사채 발행·유통시장 정비, 영문공시의 범위 확대 실시
 - 중견·중소기업에 관련된 회계기준·내부통제 보고제도 개선, 4분기 보고의 대폭 간소화(2010년 중 실시)
 - 국민금융자산을 성장분야와 지역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의 적극적 대응 촉구, 정부계 금융기관·재정투융자 등의 활용과 펀드운용방식(fund scheme)의 활용·검토 등 민관 총동원을 통한 대응 추진
 - ‘신금융입국’을 목표로 2010년 중 구체적인 대응 실시

. 21 가

- 일본정부는 7개의 전략 분야에서 경제성장 기여도가 특히 높다고 평가되는 21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음.

- 이하에서는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1)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통한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확대

- 기존의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적용 범위를 태양광 발전에서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발전으로 확대하고, 잉여전력 매입에서 전량 매입으로 확대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전략임.
-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시장을 10조 엔 규모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임.

2) 「환경미래도시」 구상

- 스마트그리드, 재생가능에너지, 차세대자동차 등을 통합한 환경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함.
- 지원대상은 현재 일부 환경모델도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서 엄선하고 보조금, 세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함.
- 이렇게 개발된 환경미래도시 모델을 패키지로 해외에 수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는 정부간 협력을 추진함.
-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미래도시정비촉진법(가칭)」을 제정함.

3) 삼립·임업 재생 플랜

-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을 이루기 위해 경영규모 확대, 기계도입 확대, 정부지원의 선택과 집중 등을 실시함.
- 이를 위해 삼림경영자가 책정하는 「삼림경영계획(가칭)」을 창설하고, 임업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삼림관리·환경보전 직접지불제도(가칭)」를 신설함.

- 이를 통해 10년 이내에 수입목재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임업기반을 확립하고 목재수요확대를 도모하며 목재자급률 50% 이상을 달성함.

4) 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제도

- 암 등 중점 질환별로 전문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형성하게 하고 연구비, 인재를 중점 지원함.
- 선진의료에 대한 규제완화를 도모하고 신의료의 실용화를 촉진함.
- 세계표준의 의약품, 의료기기를 보험 외로 병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치료환자에게 치료의 선택범위를 확대함.
-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약 7,000억 엔의 경제효과를 기대함.

5) 외국인 환자 획득 증대

- 아시아를 중심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외국인 환자가 일본을 방문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함.
- 「의료체제비자」를 신설하여 입국절차나 회수, 기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외국인 의사, 간호사의 일본에서의 진료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함.
- 외국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만들고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해외 홍보 강화, 의료언어인재 육성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방일 치료를 촉진시킴.

6)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촉진

-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일본 민간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민협력체제를 구축함.
- 이를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전략프로젝트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본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패키지로 집약하여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재외공관에 「인프라 프로젝트 전문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제협력은행(JBIC), 국제협력기구(JICA)의 자금지원 기능을 확충함.

- 지방자치체의 수도권 등 상하수도 분야 공익사업체의 해외 진출방안을 책정하여 추진함.

-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19.7조 엔의 인프라 수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7) 법인실효세율 인하와 아시아 거점화 추진

- 일본 국내에서의 법인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일본에 입지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함.
- 일본에 진출한 외자기업이 유출되는 등 일본의 약화된 입지 경쟁력을 회복하고 아시아 본사, 연구개발거점으로서 일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제도 도입, 「아시아 거점화·대일직접투자촉진프로그램(가칭)」 실시 등을 추진함.
- 이를 통해 외자기업에 의한 고용을 배증하고 대내직접투자도 배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8) 글로벌 인재육성 및 고도인재 수용확대

- 일본의 교육이 글로벌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인식하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교직원, 외국인 학생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여 교육의 글로벌화를 촉진함.
- 일본인 학생의 유학이 저조하여 글로벌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일본학생의 해외유학, 연수를 지원함.
- 해외우수인재유치를 위해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입국을 용이하도록 함.
- 이상의 노력을 통해 일본인의 해외유학생 30만 명, 우수 외국인 학생 일본 유학 30만 명을 달성하도록 함.

9) 지적재산·표준화 전략과 쿨 재팬의 해외진출

- 과학기술전략과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할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전략본부(가칭)」를 창설하여 지식재산 취득과 활용, 특정 전략분야 국제표준획득의 로드 맵을 책정함.
- 일본의 소프트 파워인 「쿨 재팬」(패션, 콘텐츠, 디자인, 음식, 전통·문화·관광, 음악 등의 총칭)의 아시아 수출을 1조 엔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10)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 구축

- 2010년 가을까지 「포괄적 경제연대 기본방침」을 책정하여 주요국과의 경제연대협정의 추진 방안을 마련함.
- 「동아시아 공동체구상」의 구체적 안으로서 FTAAP를 제시하고 APEC에서 이를 논의함.

11) 「종합특구제도」 창설

- 대도시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국제전략 종합특구」를 설치하여 성장동력산업, 외자기업의 집적을 촉진함. 이를 위해 특구에서는 규제 특례조치와 세제·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활성화 종합특구」를 설치하고 규제 특례조치와 세제·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함.
- 공항, 항만 등 물류거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이를 위해 하네다 공항을 「24시간 국제거점공항」으로 발전시키고 소수의 유망한 항만에 대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12) 「방일 외국인 3,000만 명 프로그램」과 「휴가취득의 분산화」 조치

- 2020년까지 방문 외국인 2,500만 명, 보다 장기적으로 3,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이를 위해 특히 중국 관광객의 방일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함. 예를 들면 중국인 방일 관광 비자 취득을 간소화하거나 의료관광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
- 휴가가 한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연휴를 지역 블록별로 분산시켜 혼잡방지, 잠재수요 증진 등의 효과를 얻고자 노력함.
- 2,500만 명 방일 관광객 유치를 통해 10조 엔, 신규고용 56만 명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며 휴가취득 분산을 통해 1조 엔의 신규수요 창출이 기대됨.

13) 중고주택시장,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

- 신축주택을 중시하던 정책에서 중고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함.

-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종래의 주택 에코포인트 이외에 새로운 에너지 절약기준을 책정하고 이를 표준적 주택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함.
- 중고주택 유통시장·리모델링 시장을 20조 엔 규모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14) 공공시설의 민간개발과 민간자금 활용사업의 추진

- 재정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필요한 사회자본정비나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민간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
-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정부가 보유하나 사업권은 민간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컨세션 방식⁵⁾을 도입하는 등 PFI 제도(민간자금을 활용한 사회자본정비방식)를 개선함.
- 이를 통해 2020년까지 PFI 사업규모를 10조 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15) 「선도 대학원」 구상 등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인재육성

- 일본이 잘하는 학문분야를 모아 선도 대학원을 구축하고 성장분야에서 세계의 리더가 될 박사인재를 양성함.
- 국내외 우수 연구자를 결집하여 국제두뇌의 핵이 되는 연구거점을 구축함. 이를 위해 첨단연구시설, 지원체제 등을 정비함.

16) 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

- 일본은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경쟁력 저하의 원인임.
-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ID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15년 경까지 모든 세대에게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5) ()

17) 연구개발투자의 충실

- 2020년까지 연구개발투자를 국민 합계 GDP 4% 이상으로 확대함.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전략본부」를 새로운 사령탑으로 하고 연구개발예산배분의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함.

18) 유치원과 보육원의 통합

- 현재 분리되어 있는 보육원과 유치원을 「어린이원(가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어린이원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 나감.
- 2017년에는 대기아동을 모두 해소시키고 보호자가 어떤 형태의 직장에서 일하든지 모든 아이들이 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9) 「캐리어 段位」제도와 퍼스널 서포트 제도의 도입

- 간병, 보육, 농림수산, 환경·에너지, 관광 등 성장분야를 중심으로 영국의 직업능력평가제도(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를 참고로 하면서 「캐리어 段位」제도를 보급함.

20) 「새로운 公共」

- 지금까지 관(官)이 독점해 온 영역을 공공(公共)에게 개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 나감.

21) 종합거래소 창설

- 「신금융입국」을 건설하기 위해 2013년까지 증권·금융, 상품을 일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종합거래소 창설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가능한 빨리 실시함.
- 종합거래소를 아시아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를 다시 아시아에 투자하는 아시아의 금융센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3. 가

가.

- 첫째, 「신성장전략」의 가장 큰 의의는 환경문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같이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경제성장에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일본정부는 위와 같은 정책방향을 제3의 길이라고 칭하면서 환경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고 있음.

-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향후 일본과의 경쟁과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신성장전략」은 내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경제의 활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관점을 분명히 함.

- 하토야마 전 정부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급감하자 내수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에 경도되는 성향을 보였음.

- 그러나 이번 「신성장전략」은 아시아 시장의 활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서 단순히 내수 확대만을 강조하였던 이전의 정책방향을 바르게 수정하였음.

- 셋째, 「신성장전략」이 제시한 7개의 전략 분야별로 구체적인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 제시된 국가전략프로젝트 중에는 기존의 정책노선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됨.

- 예를 들면,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중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음.

-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량 고정가격 매입
- 환경미래도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해외수출 촉진
- 의료관광 활성화와 의료시장의 대외개방
- 인프라 산업(고속철도, 원자력, 상하수도 등)의 아시아 시장

진출 강화

- 법인세율 인하와 아시아 거점화 추진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구축
- 종합특구제도 창설과 아시아 관광객의 일본유치 강화
- 연구개발과 지식재산전략의 통합 및 추진체제 재편
- 증권, 금융, 상품의 종합거래소 창설

■ **넷째, 환경·에너지, 관광, 물류, 제조업,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다시 「국제적 허브」로 복원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민일체」의 협력체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일본의 기술적 강점을 패키지로 묶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임.
- 관광과 물류분야에서는 하네다 공항의 거점 공항으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한국 등에 빼앗긴 허브기능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음.
-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을 다시 아시아의 거점국가로 복원시키고 금융 분야에서는 종합거래소 설치 등으로 일본이 금융허브로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임.
- 이상과 같이 국제적 허브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본은 이른바 「관민일체」의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어 강력한 정부 주도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첫째, 「신성장전략」의 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역량과 추진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임.**

- 「신성장전략」의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략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면 『일본경제신문』이 조사한 전문가 평가(2010. 6. 19, 3면)에 의하면 전략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평가자 5인 중 3명이 C(A부터 E까지 5단계 평가), 2명이 D를 주었음.

■ **둘째,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성청의 관할 업무 영역을 초월하여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추진주체의 형성이 필요함.**

- 현재 국가전략국이 이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전략분야에서는 국가전략프로젝트위원회와 같은 범정부적 조직을 만든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음.

- 문제는 성청을 초월하는 범정부적 조직이 실제로 각 성청간의 협업을 얼마나 잘 유도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나 이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한 상황임.

- 성청의 협업이 필요한 몇 가지 정책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종합거래소 창설은 금융청,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업성이 관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와 상품거래소의 통합이 필요함. 2007년 자민당 정권이 추진하였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음.

- 보육소(후생노동성)와 유치원(문부과학성)을 「어린이원」으로 통합하는 문제도 기득권을 가진 단체의 반대가 나오고 있음.

- 법인실효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경제산업성은 적극적이던 반해 재무성은 신중한 입장이어서 구체적 안의 도출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셋째, 제시된 정책들 중에는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정책들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와 이의 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하토야마 전 총리도 정권공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실패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경험이 있음.

- 재무성은 재원마련을 전제로 신규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신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지출삭감이 불가피하고 성청 간의 대립도 발생할 수 있음.

-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정책들로서는 환경미래도시 구상, 연구개발투자 강화(GDP 4% 이상), 법인실효세율 인하(5% 인하로 1조 엔의 세수 감소 예상) 등이 있음.

- 이 경우 「신성장전략」에서 제시된 정책들이 단지 계획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 일본정부는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소비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주목되고 있음.

■ 일본이 여러 분야에서 잃어왔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어서 이들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신성장전략」을 통해 인프라 수출경쟁력 강화, 관광·물류·금융·의료의 허브기능 회복, 환경·에너지 대국 지향, 강력한 지식재산강국 실현 등을 도모하고 있음.

○ 인프라 분야에서는 원자력 발전, 고속철도, 상하수도 등 물 관련 인프라, 녹색도시건설 등 많은 영역에서 일본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관광객 유치 경쟁, 거점공항 경쟁, 금융허브 경쟁, 의료관광객 유치 경쟁 등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과 제품의 수출시장에서도 일본과의 경쟁이 예상되며 지식재산이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도 추진체제를 개편할 예정이어서 향후 관찰이 필요함.

■ 일본정부가 특정 정부부처나 특정 업종의 범위를 떠나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복수 업종이 참여하는 관민일체형 협조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함.

-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국가전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국가전략프로젝트위원회를 창설할 예정이며 이 위원회는 국가전략국과 더불어 정부부처와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전략분야별로도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체제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관민협조체제 하에서 일본기업은 개별 제품의 수출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 패키지를 수출하는 형태로 해외진출방식을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임.

○ 물 관련 사업의 해외진출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개별 품목의 수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수자원의 확보에서부터 재이용에 이르기까지의 종합적 서비스를 수출하고자 함.

○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물 관련 정부부처의 연락회 설치, 종합적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각종 관련 업계의 조직화 등을 도모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관민일체 협조체제가 잘 작동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KIEP